

제3부 주요 추진 사항

1. 관계부처 출장 / 233
2. 관련기관 견학 / 271
3. 자문위원회 개최 / 273
4. 관계부처 회의 / 275
5. 공청회 개최 / 277
6.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 결제 요약 / 289

1. 關係部處 出場

가. 제1차

1)出張 概要

- 출장기간 : '99. 12. 23~24, 27~30 (6일간)
- 출장기관 : 행자부 등 17개 부처·기관·시·도
- 출 장 자 : 기획총괄팀장(배영준 서기관) 외 14명
- 출장목적 : 안전관련 주요부처·기관에 대한 자료수집

2)出張結果 主要內容

조직 개편

● 災難管理體系의 多元化 (행정자치부)

○ 現 況

-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인위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법, 전시대비 민방위기본법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 재난대응시 「재해대책본부」·「사고대책본부」등을 별도 설치, 운영

○ 問題點

- 현 법체계가 재해·재난을 구분함에 따라 상황대처 및 구성 조직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곤란
- 재난관리법상의 안전대책위원회(심의)와 사고대책본부(수습), 자연재해 대책법의 재해대책위원회(심의)와 재해대책본부(수습)가 별도 운영되고, 대응기구인 긴급구조본부가 설치 운영

- 재난관리법상의 재난관리대책계획,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대책계획,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운영계획 별도수립

○ 改善 方案

-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련 법령을 통폐합하여 안전관련기본법을 제정
-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구분 없이 심의·수습·대응기구 통합

○ 檢討 意見

- 관계법령 통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직·기구를 우선 통합한 후, 장기과제로 법령통합 추진검토

● 災難業務 所管部處 分散으로 效率的 業務推進 困難 (행정자치부)

○ 現 況

-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기능은 행자부(재난관리과),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는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거부처별로 분담

※ 재난관리 일반업무 : 행자부(민방위방재국),
 구조물안전(건축물 등) : 건설교통부(시설기술안전공단),
 소방분야 : 행자부(소방국),
 전기안전 : 산업자원부(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 : 산업자원부(가스안전공사),
 사업장안전 :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 問題點

- 동일 대상시설을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중복점검 및 지도·감독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

- 대형사고 발생시 부처별로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점검대상, 기간, 보고서식 등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업무 효율성 저하

○ 改善 方案

- 부처별 재난업무 협의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재난관리 총괄 전담조직 강화
- 예방업무는 부처별로 수행하되 총괄부서는 부처간 업무조정 및 재난대응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

○ 檢討 意見

- 선진국의 경우 예방업무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재해·재난대응 기구는 일원화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개선대책 마련
- 재난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할 경우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

● 地方 安全管理 部署 構造調整 및 人員減縮 (시·도)

○ 現 況

- 인원감축
 - * 광주(63→48명), 대전(64→41명), 강원(37→14명), 경북(24→11명), 충남(28→24명), 충북(28→24명)
- 안전관리조직 체계
 - 건설교통국(건설도시국) 소속 : 대구, 대전, 충북, 경북, 전남
 - 자치행정국 소속 : 강원
 - 소방안전본부 소속 : 광주, 충남

○ 問題點

- 건설교통국 또는 자치행정국에 안전관리 부서가 소속된 경우, 국의 다른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하며,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함
- 구조조정시 안전관련 근무자의 인원감축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현재인원으로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급급하며, 시·군의 경우 1인이 재난관리업무를 수행

※ 초임 발령자, 신규승진 임용자, 시군 전입자들이 안전관리 조직에 우선 배치되어 있어 전문성 및 경험 부족

○ 建議 事項

- 재난관리부서를 감사실 또는 총무과나 기관장 직속으로 편제조정 검토
- 안전관리 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 부여와 함께 안전관리조직을 종전대로 확대개편(과단위)

○ 檢討 意見

- “작은 정부론”의 관점에서 조직·인원 확대는 불가하며, 분산되어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부서에서 책임 수행토록 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안전관리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장들의 지속적인 관심제고 방안 마련 필요

● 地方 安全管理 部署 運營體系 (시·도)

○ 現 況

- 지자체에 따라 기존의 재난관리 부서와 소방관서와의 통합체제 또는 기존의 분리된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
 - 통합체제 : 서울(소방방재본부), 광주(소방안전본부),
충남(소방안전본부) 등
 - 분산체제 : 대구, 대전, 강원, 경북, 전남, 충북 등

○ 問題點

- 통합체제 운영기관
 - 재난관리조직과 소방조직간의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내부 구성원간의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 기존의 재난관리조직은 일반직 공무원, 소방조직은 소방직으로 구성
- 분산체제 운영기관
 - 방재·재난·소방조직간의 정보교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함

○ 改善 方案

- 우선 상황실을 통합하여 국민이 쉽게 재해·재난·구조·구난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이미 통합한 시·도의 안전조직 운영성과를 참조하여 재난관리조직과 소방부문 조직의 점진적 통합 추진

○ 檢討 意見

-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측면에서 안전관리 조직의 통합 필요
- 다만 통합시 상이한 배경의 구성원이 화학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기관장 관심과 직원 사기진작 등 대책강구 필요

제도개선

● 多衆利用業所の 安全管理 (행정자치부)

○ 現 況

-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유흥주점 200㎡ 미만은 불연성 내장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호프집·소주방·오락실·PC방·콜라텍·전화방 업종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누락
- 화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량 피난방화시설 및 내장재에 대한 시정 명령권 부재(소방법)
-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 약화 및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위주의 행정 치중으로 안전사고 예방행정 미흡

○ 問題點

- 방음효과를 위한 칸막이·판자 속에 스티로폴 사용, 피난계단 및 통로 부분의 가연성 내장재 사용으로 화재발생시 급속히 연소확대
- 비상구·통로 등에 장애물 또는 시진장치가 되어 있거나, 건축물 옥상에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대피통로가 차단되어 화재발생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 건축물 완공후의 용도변경 및 내부시설 개조가 있을 경우 피난·방화 시설의 설치기준 및 내장재 설치기준 준수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 改善 對策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피난계단, 비상구 구조, 내장재 등은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보완(건축법 및 소방법에 반영)

- 현행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고 있는 소방·방화시설기준의 보완 및 강화
 - 소방법령에 가연성 내장재에 대한 사용금지조항 신설
- 다중이용시설로 용도변경시 소방·방화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의무화

○ 檢討 意見

- 화재안전기준 관련사항 소방법상 규정 마련
 - 건축법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건축법 제43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개정
 - 내장재관련 하부법령을 소방법규로 이관 또는 개정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 식품위생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의 방재시설 기준 강화

●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 現況 및 問題點

- 유해화학물질의 사고는 생산현장, 화학물질의 운송, 소비, 및 폐기 등 여러 형태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
- 다종의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관련 규제가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안전관리 체계의 일관성 부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소방법(위험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건강장해물질), 농약관리법 등

○ 改善 對策

-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효율적인 지휘체계 마련
- 각 개별법간 중복되는 사항의 통합 및 조정방안 마련

○ 檢討 意見

- 각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유해물질 사고대비에 관한 사항들의 개선 필요
- 유해물질 사고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별 사고대응 체제 구축 필요
- 사고대응기관의 유해물질 사고대응에 관한 계획, 대응절차, 훈련, 응급 의료프로그램, 복구과정 등의 법제화 필요

● LP가스 安全管理 (산업자원부)

○ 現況 및 問題點

- 전국의 LP가스 용기(주로 20kg, 50kg)는 현재 1,300만개가 유통 및 보관 되고 있어 사고위험성 계속 잠재
- LP가스의 사용안전 및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97. 2부터 체적거래제를 보급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비용부담 가중으로 전환실적(대상 770만호의 18.2%) 미흡
 - * 체적거래제 : LP용기 집합설비 설치, 고무호스 대신 금속강관과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계량기(m³ 단위)에 의한 요금정산제

○ 改善 對策

- 일정장소에 공동저장시설(소형저장탱크)을 설치하여 공급
- 도로교통법 단속기준에 가스운반기준 반영
- 체적거래제 시설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용자에서 공급자로 전환하고 비용회수는 가스요금에 포함하는 방안 강구

○ 檢討 意見

- 재래시장, 고지대의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LP가스사고 안전대책 수립
- 소형저장탱크설비와 퓨즈콕 등 안전장치의 설치를 공급자 의무로 전환 검토

● 電氣設備 安全管理 (산업자원부)

○ 現況 및 問題點

- '98년 전기화재사고는 총 화재발생건수 33천건 중 11천건으로 총화재의 33.3%로 높은 수준임
- 사용전 검사대상 설비가 수전설비에 국한되고,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부족 및 부적합시설 개수의지 미흡

○ 改善 對策

-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범위를 수전설비 및 고압이상 구내배전설비(옥내 배선, 전등·전열·동력기계기구)로 확대
- 유흥업소 및 다중이용업소 전기설비 사용전 점검제도 도입 및 정기검사 점검주기 강화

○ 檢討 意見

- 전기화재사고의 감소를 위해서는
 - 유흥업소 등은 영업허가 단계에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필증을 허가관청에서 확인하도록 법제화하는 등의 제도개선과
 - 전기안전 계몽·홍보 등 국민안전의식 강화 필요

● 在來市場의 再開發 活性化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 現況 및 問題點

-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850여개소로 화재발생시 인명 등 피해범위가 크므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긴급

- 현재 조합원간의 합의도출 곤란 및 부동산경기 퇴조로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부진으로 실적 미미

○ 改善 對策

-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 개발이익 확대를 위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투자를 우선하도록 유도

○ 檢討 意見

- 노후된 재래시장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 각 지자체 조례로 가칭 「재래시장 정비지구」를 지정토록 하고, 동 지구에서는 준 주거지역 정도의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유도
- * 도시계획법 등 관련규정 개정 필요

안전운동추진

● 安全文化 推進體系 (노동부)

○ 現 況

- 정부 차원의 중앙조직인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와 관련위원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하며,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 중앙본부」의 활동만이 명맥을 유지
- 민간단체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제외하고는 활동이 미미
- 안전문화 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아 안전의식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함

○ 問題點

- 추진주체간의 업무를 조정할 중앙협의회의 총괄기능 역할이 미미
- 안전문화추진중앙본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어서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부족
- 안전관련 부서 종사자들의 잦은 교체로 사업 연계성 기대곤란

○ 改善 對策

- 안전문화 추진 법·제도적 근거규정 마련
-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안전관련부서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 확보 필요
-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

○ 檢討 意見

- 정부주도의 문화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현재로서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은 정부주도가 불가피함
- 민간단체 활성화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바탕으로만 가능하므로 안전의식 홍보대책 마련 필요
- 정부주도의 안전문화운동에 노·사 및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하여 전문성 확보기회 제공 필요

● 地方自治團體의 安全文化 運動 (시·도)

○ 現 況

-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매달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를 개최하고 있을 뿐, 기타 안전운동은 미미
-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시민, 사회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 부족

○ 問題點

- 안전관련 조직축소 및 인원감축 등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가 저하
- 안전문화 관련 사업예산이 부족
- 안전문화운동 추진 관련기관, 단체의 인력난으로 유기적 협조 체계미흡

○ 改善 對策

- 안전관련 조직을 기획, 감사 관련 부서로의 이관을 희망
 - 일관된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이 통일된 안전조직 구축
- 시·군·구의 안전관련 업무담당자 증원
- 초·중·고생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교육 실시방안 강구 및 안전 관리 봉사활동에 대한 내신성적 반영

○ 檢討 意見

-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련 조직 검토
- 초·중·고생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봉사활동에 대한 내신성적 반영검토
- 효율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적정한 조직, 인원, 예산확보 방안 검토

● 假稱「民防衛·安全點檢의 날」行事 運營 檢討 (행정자치부, 노동부)

○ 現 況

- 1996. 4부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설정, 운영
-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자체시설 또는 행사주관기관, 단체에서 선정

○ 問題點

- 범국민적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와 지방기관, 사회단체, 시민,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태

○ 改善 對策

- 「안전점검의 날」 조정 운영 : 매월 4일 → 매월 15일
 - 국민의 인지도 및 참여도가 높은 「민방위 날」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합 실시, 가칭 「민방위·안전점검의 날」로 사용

○ 檢討 意見

-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민방위 날과 통합 실시할 경우 정부·지자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가 용이
 - 행정의 능률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그동안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온 부서(노동부, 안전문화추진본부)의 반대 예상
-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노동부의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민방위기본법령 개정) 등을 거쳐 민방위 날과 통합 실시하는 방안강구

조직개선

- 업무의 전문성, 구조조정시 1차적으로 감축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영향으로 직원들이 안전관련 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 시·도의 경우 재난·재해관리 담당부서가 시·도마다 다르거나, 통합 및 분산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바
 - ※ 광주시 :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전남도 : 건설교통부 재해재난과
 -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 추진으로 안전업무 비중 확대필요(공통)

제도개선

- 가동중인 원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자의 「주기적인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필요(과기부)
 - *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 시설변경, 운전경험, 기술발전등과 같은 누적영향을 감안, 잔여 사용기간중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일정주기로 수행되는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
- 유해화학물질 수송중 사고발생시 대책 및 생산·유통·사용·처리에 관한 종합정보체계 구축 필요(환경부)
- 시설물의 정보체계 구축으로 과학적 유지관리방안 강구요망(시설안전기술공단)
- 교량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복되어 개선 필요(대전, 충북)
- 지자체 특별교부세에 안전관련 예산 반영요망(충남)
- 노래방, 비디오점 등의 안전점검이 경찰·소방·지자체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일원화 또는 통합점검이 필요(문광부)

안전운동 추진

-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주부, 모범택시기사, 시민단체 직원 등으로 신고모니터 요원을 구성, 건물, 축대 등 시설물 붕괴위험 등 신고시 전화카드 등 사례(경북)
- 구조물 안전점검에 대한 민간전문기관의 비용요구가 과도한 경향이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이를 대행해 주어 처리하는 안전점검 청원제 운영 필요(대구)

나. 제2차

1)出張 概要

- 출장기간 : 2000. 2. 23~2. 29(7일간)
- 출장기관 : 행자부 등 41개 기관
- 출 장 자 : 기획총괄팀장(배영준 서기관) 외 24명
- 출장목적
 - 「자체검토 개선안」, 「우선추진과제」 발전·보완을 위한 자료수집
 - 지진, 해운 등 「부처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
 - 기타 안전운동추진 관련 현장 및 시민단체 방문 의견청취 등

2)出張結果 主要內容

조직개편

● 基礎自治團體 災難管理 組織 改善 (행정자치부)

○ 現 況

- 기초자치단체별로 재난관리조직과 재난·재해업무의 수행방식에 차이가 있음(통합운영, 분산운영)
 - ※ 자치행정국, 기획실, 건설도시국 등에 소속
- 재난관리대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은 건축, 토목직으로만 구성
 - ※ 재난위험시설이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분야 등으로 다양

○ 問題點

- 재난·재해 업무의 운영방식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재난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순환교육이 어려우며 기술직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일반직이 무리한 업무 추진

※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감소와 신속대응이 어려움

○ 改善 對策

- 재난·재해업무의 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며, 담당인력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한 승진기회 우선 부여 필요

○ 檢討 意見

- 재난·재해관리 방식의 자율화 및 담당자 사기진작 방안 강구 필요

● 麗川 石油化學團地 安全管理體系 統合運營 (행정자치부)

○ 現 況

- 여천산업단지의 성격상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
 - ※ 단지 성격상 업체간 연결관들이 지하에 다량 매설되어 있음
- 여천지역내 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화학구조대 설치 운영 중
 - ※ 국내 유일의 화학구조대(소방인력 : 23명, 소방차량 : 7대)

○ 問題點

- 대형사고 발생시 업체에서 신속한 보고 등 조치 지연
- 석유화학단지내 지하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결여
- 재난종합상황실에 전문요원(유관기관) 미배치

○ 改善 對策

- 사고발생 보고 지연시 업체에 책임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
- 지리정보체계 및 종합적 방재계획모델 수립 및 운영
 - ※ 산업자원부에서 국가공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협조
- 재난종합상황실에 전문인력 배치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檢討 意見

- 여천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을 위한 상황실 등 통합체계 및 방재모델 개발과 훈련 강화
- 석유화학단지내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 濟州道 119 防災狀況室 運營 改善 (행정자치부)

○ 現 況

- 운영인원 : 19명
 - 소방직 : 10명(2개조로 편성 24시간씩 2교대근무)
 - 일반직 : 9명(재해·재난 총괄반 1개조 일근, 상황처리반 2개조 편성)
- 직제상으로는 119 방재상황실에 119지령담당, 상황 1·2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상황실 운영은 별도로 구성

○ 問題點

- 소방방재본부에 소방·재난·방재업무가 통합되었으나, 2중 보고로 인해 실질적인 통합 의미 상실 및 행정력 낭비

○ 改善 對策

- 통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 행정기구상 보고체계 일원화로 행정효율성 확보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檢討 意見

-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소방·재해·재난상황실을 1개 장소에 설치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
- 기초단체 상황실 담당부서 일원화 검토
 - ※ 제주시 건설과 재난관리계,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계, 북제주군 지역계획과 방재계, 남제주군 건설과 재난관리계

● 各種 災難關聯 機構 運營改善 (행정자치부)

○ 現 況

	<사고대책본부>	<재해대책본부>	<긴급구조본부>
• 본부장	도 지 사	도 지 사	도 지 사
• 차 장	행정부지사 재난기관장	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 위 원	실국 별도구성	실국 별도구성	긴급구조기관별 구성
	<안전대책위원회>	<재해대책위원회>	<민방위협위원회>
• 위 원 장	도 지 사	행정부지사	도 지 사
• 부위원장	행정부지사	소방방재본부장	기관중에서 선임
• 위 원	도단위 기관장	도 5급 이상	도단위 기관장

○ 問題點

- 재난대책기구는 모두 ‘재난관리’라는 동일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 운영에 따라 업무분산과 행정력 낭비 초래
- 제주도에서는 현재까지 사고대책본부 운영실적이 없음

○ 改善 對策

- 심의기구 통합
 - 안전대책위원회+재해대책위원회+민방위협위원회
- 수습기구 통합
 - 사고대책본부+재해대책본부+긴급구조본부

○ 檢討 意見

-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통합방안 검토
- 통합기구 관리부서 단일화 검토

제도개선

● 建築物 安全點檢과 是正措置 運營體制 改善 (행정자치부)

○ 現況 및 問題點

- 건축물 안전점검은 소방법과 건축법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나
 - 점검량 과다, 중복 점검 및 점검자의 형식적 점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방화·피난시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소방관서의 시정조치도 고발인 조사 등 절차번잡으로 이행 미흡

○ 改善 對策

- 건축물 점검 여건과 전문성 향상
- 기관간 중복점검의 일원화 및 點檢簿와 검사횟수의 개선
- 소방관서의 시정조치체제 개선
 - 시정조치권 절차 보완, 점검관행 개선 및 벌칙내용 조정

○ 檢討 意見

- 건축물 안전점검의 인력 보강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모색 필요
- 시정조치기간 장기화 방지, 시정조치권 발동과 벌칙과의 형평성 조정 등 시정조치 관련규정 보완 필요

● 安全點檢時 施設物 狀態 評價基準 改善 (건설교통부)

○ 現況 및 問題點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노후도 평가방법의 객관적 근거 미흡

- 따라서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부적합한 보수·보강방안 제시 우려
- 건설공사 관련 피해 판정을 위한 점검과 진단결과 불신 초래

○ 改善 對策

- 단위 구조물을 구성하는 部材와 部位가 무수히 많고, 주변조건이 다르며, 규모도 다양하고, 결함의 종류와 상태가 다양하므로
 -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객관적이고 정량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계기법인 퍼지이론을 이용할 수 있음
- 퍼지이론(fuzzy theory)은 주관적 정보를 언어변수로 표현하여 객관화(정량화)하는 방법으로 시설물 노후도 평가에 대한 퍼지이론의 전면적인 도입 추진 필요

○ 檢討 意見

- 퍼지이론이 도입될 경우
 - 시설물의 과대·과소 보수·보강의 문제가 해결가능
 -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므로 유지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고, 점검·진단의 신뢰성 확보 효과가 기대

● 事業場 災害豫防 合理性 提高 (노동부)

○ 現況 및 問題點

- 일제점검 등 규제를 전제로 한 단속점검과 점검반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합리적인 규정적용으로 작업환경이 개선되기보다는 은폐됨
- 사업장 안전보건환경 부서의 대행정기관 공문, 보고서 작업량이 과중하여 현장개선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음
- 화재발생후 실질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방화관리자가 책임을 짐

○ 改善 對策

- 정부의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사업장 출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규제, 처벌보다는 예방점검, 진단위주로 수행
- 방화관리자는 기술자격에 국한하기보다는 관리 또는 감독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

○ 檢討 意見

- 정부의 사업장 안전보건환경과 관련한 접촉창구의 단일화 또는 단순화 필요
-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점검 비용 저렴화
 -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배치되나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지원 필요

● 事業場 自律安全 提高 (노동부)

○ 現況 및 問題點

- 선진국과 비교하여 점검, 검사 등을 위한 관계기관 직원의 사업장 출입 건수가 많고, 사업장 안전환경부서의 업무중 대행정관서 업무과중
- 성실하게 안전업무를 수행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음

○ 改善 對策

-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중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점검을 공평한 기회에 의하여 실시
- 안전인증 등을 통한 자율안전을 유도하고 사업장 내부의 안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책임지며 법규위반시 가혹한 처벌필요

○ 檢討 意見

- 점검은 통상적인 계획에 의해 미리 고지하고 특별점검은 사업주의 요구, 사고의 발생, 고발, 매스컴의 보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 장기적으로 APELL 등을 통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이에 필요한 기반체제를 지원
 - * APELL : 지역별 안전보건 비상대응 체제(Awareness, Preparedness for Emergency Planning of Local Level)

● 有害・危險物質 安全性評價 및 資料構築 (노동부 등)

○ 現況 및 問題點

- 국내에서 화학물질 독성, 유해성 자료의 생산은 일부 가능하지만, 물리 화학적 위험성 평가시스템은 전무함
- MSDS제도 이행 사업장의 경우에도 혼합물인 경우에는 안전성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방치할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MSDS 제도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 * MSDS : 물질안전 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 改善 對策

- 유해・위험물질의 위험성 판정시험법 및 판정기준 개발
- 유해・위험물질의 위험성 자료생산 시험기관의 배양

○ 檢討 意見

- 안전성자료 생산시스템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가 어려우며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차원에서의 투자 필요

● 有害・危険物質 情報化 및 事故對應體制 構築(행정자치부・노동부 등)

○ 現況 및 問題點

- 울산지방 폭발화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방력이 부족하여 화학 물질의 폭발・화재 대응에 한계
- 소방공무원의 원시적인 화재대처방법과 희생을 강요하는 지휘체계로 소방인력 사상자가 많이 발생함
- 운송 중 화학물질의 실질적 관리가 되지 않음

○ 改善 對策

- 울산지역 등 석유화학단지의 화학소방대 추가 설치(국고지원 필요)
- 소방인력의 획기적인 증원(표준정원예의 특례인정 필요)
- 화학물질 정보공유를 통한 소방대의 위험물 대응기술 배양

○ 檢討 意見

- 석유화학 콤비나트에서는 각 회사가 출자하여 소방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별 자체 소방력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범정부 차원의 국가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유해・위험물질 사고대책 강구 필요함
 - 가칭 「석유 콤비나트 재해방지법」 제정 검토

● 脆弱 LPG施設에 대한 示範 改善事業 推進 (산업자원부)

○ 現況 및 問題點

- 최근 5년간 가스사고는 전체 2,251건중 LPG관련사고가 1,454건 64.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가스가 30.9%, 고압가스 4.6%가 발생

- 재래시장, 노후불량주택에서 사용중인 가스시설이 대부분 노후화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용기, 고무호스 등에 의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안전관리가 취약

○ 改善 對策

- 재래시장 및 노후불량주택의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조사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지역본부), 가스공급자(정유사, 수입사 및 직영대리점), 소비자대표로 구성
-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은 재래시장 등에서 동의절차 등 시행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시범지역을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선정

○ 檢討 意見

- 체적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설개선에 따르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장기간 공급권 보장과 감가상각비용을 가스 요금에 부과
- 개선비용이 과다할 경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등 지원방안 강구

● 不適合 電氣設備 改·補修센터 運營 (산업자원부)

○ 現況 및 問題點

- 매년 전기사고로 인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98년 전기화재는 10,897건(33.4%)로서 사망자 45명, 재산피해 576억원 발생
-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후불량설비 과다발생
 - 정기점검시 불량판정시설의 30%는 개수 불이행

○ 改善 對策

-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수 사업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공사업자 단체간에 합동시행
 - 공사참여업체는 기술능력, 신뢰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되 수용자 만족도에 따라 매년교체
- 개·보수 비용을 수용가가 직접 공사업체에 지불
 - 개·보수 비용은 자재비, 인건비 등을 엄격히 평가한 실비 적용

○ 檢討 意見

- 「전기설비 개·보수 센터」 설치(한국전기안전공사)
 - 개수대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공사시행 상태 확인 등
 - 소요인력 확보 : 55명(기존인력 활용)
- 중·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성 검토(산자부)
 - 노후전기설비 개수사업의 절차와 기준규정

교통개선

● 大型버스의 車輛 安全基準 強化 (건설교통부)

○ 現況 및 問題點

-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따라 대형버스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나, 관련 법규상 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이 부실
-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험항목은 41가지로 대별되나, 승용차 위주여서 대형승합차 항목은 불충분

- 경차 및 4.5톤 이하의 승합차에는 정면충돌과 이동벽 뒷면추돌 시험방법만이 정해져 있고, 대형승합차의 경우 이 같은 규정조차 없음
- 제92조의 천정강도, 제동장치 및 최소회전반경에 대한 규정도 승용차에 국한되어 있어 대형차량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

○ 改善 對策

- 4개 기준항목(충돌시험, 전복 또는 천정강도 시험, 제동시험, 최소회전 시험) 등에 관하여 대형자동차에 적합한 조항 신설 및 보완필요
- 특히 대형승합차 제동장치는 듀얼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하여 일부 제동장치가 파손되어도 여분의 장치가 뒷바퀴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천정강도는 근본적으로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기준설정이 요구됨

○ 檢討 意見

- 현행 승용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험항목을 대형승합차 부분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 제시 필요

● 地自體의 交通安全 推進體系 確立 (건설교통부, 경찰청)

○ 現況 및 問題點

- 지자체의 교통안전 추진체계는 교통운영 관련부분은 지방경찰청이, 도로 시설물 운영관리는 각 도로관리자가 구분하여 담당
-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는 관련 부서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서로의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만 관여하는 실정
- 부산직할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교통안전 전담조직이 없고, 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별도 협의체도 없어 상호협조 곤란

-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고 피해가 연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 대책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정

○ 改善 對策

-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확대 지정하여 책임행정이 구현되도록 업무조정 필요
- 「교통안전법」에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실행프로그램이 필요
- 지자체별로 도로관리자와 경찰청 및 관련기관간의 교통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지역교통안전의 구심체가 되도록 관련 법규 개정 필요

○ 檢討 意見

-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구체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의 관련조항 개정안 제시 필요

● 市民團體와의 安全運動 連繫 方案 (안전실천연합 등)

○ 現況 및 問題點

- 정부와 시민단체가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상호연계 미흡
 - 시민단체 중 안전운동 전문 추진단체는 교통관련 단체가 대부분
 - 가정·학교·교통 등 안전분야를 모두 관계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유일한 실정이며 지역활동을 위해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단계
 - 월드킵문화시민중앙협의회는 질서·청결 등을 주제로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활동이 미약한 실정

○ 改善 方案

- 시민단체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시민단체가 안전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구성
 -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확대
- 각 분야별(교통, 상업, 가스, 전기 등) 시민 대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하도록 상호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 시민안전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간의 정보망 연결
 - 신고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檢討 意見

-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은 부처별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좀더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 등의 마련이 필요

● 意識改革 自願奉仕者 活動 促進方案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등)

○ 現況 및 問題點

-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신고요원(모니터)을 시·군·구별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상 지원이 미약한 실정
- 시민단체 등은 회원과 희망자들로 하여금 전화상담, 봉사활동 등에 활동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관리가 미비

○ 改善 方案

- 전국 253개 시·군·구별로 의식개혁 자원봉사자를 500명 정도 육성
 -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자원봉사자 은행을 운영, 희망자들의 개인기록을 철저히 관리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기본교육(8시간)을 실시한 후 위촉장을 수여하고 능력별 봉사활동 전개

- 평상시에는 교통안전 등 각 분야의 안전수칙위반,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및 계도활동을 실시
 - 재난시에는 긴급 구조활동 참여(전문분야 기능보유자) 및 기타 봉사 활동 실시
-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해 봉사시간에 따른 기념메달 수여 및 포상, 해외 연수 기회부여 등 인센티브제 도입

○ 檢討 意見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기본으로 하여 통합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상호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정비

다. 「部處推進課題」推進狀況 및 綜合對策(案) 包含與否 檢討

● 地震 安全對策 (행정자치부)

○ 우리 나라 地震發生 現況 및 特性

- 우리 나라는 일본·필리핀 등이 속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와 경계를 이루는 유라시아 지진대에 속하고 있음
- 최근 발생되는 지진은 규모(M) 5.0 이하로 피해 미미
 - ※ '78년 홍성지진(규모 5.0) 피해 : 부상 2명, 건물 등 267동 파손
- '92년까지는 안정된 상태를 보이다가 '93년 이후 발생횟수 증가
 - ※ '78~'92년 : 연평균 18회, '99년 : 36회

○ 그간 政府의 地震對策 推進狀況

-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 수립근거 마련('95. 12)
 - 중앙부처에 대하여 지진피해 경감대책 마련 의무화
 - 건물·교량 등 20개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 의무화

- 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96. 11)
 - 세부추진계획 수립('97. 4) 및 종합대책 보완('98. 5, '99. 9)
- 지진방재 종합대책 보완계획 수립('99. 12. 23)
 - 관계부처 차관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

○ 綜合對策 補完計劃의 主要內容 및 向後 推進計劃

- 지진대비 조직·인력 보강
 - 정부내 지진담당과 신설 및 지진 연구기능 통합 검토
-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대상시설 확대
 - 2000년말까지 도시철도·상수도 등 8종 시설의 기준을 제정
 -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4.5~5.0 → 5.0~7.0으로 상향조정
 - 組積造 건물,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내진설계 대상에 추가
- 기존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기에 완료
- 노후 지진관측장비 교체·보강 및 교육·홍보 강화 등
⇒ 2000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관계법령 개정 완료

○ 檢討 意見

- 지진에 대하여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중
 - 대만·터어키 등 지진사례를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작년말 동 대책을 대폭 보완·강화 추진중
- 동 보완계획은 조직·인력에서 제도 및 기술적 기준에 이르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포괄하고 있어 추가 보완은 시기상조
- 지진발생시 피해는 1차 붕괴, 2차 화재로 이어지므로 현재 기획단에서 검토중인 부실방지대책 및 소방강화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함이 바람직함.

● 原子力 安全對策 (과학기술부)

○ 原子力 發電所 運營現況

- 우리 나라는 '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16기(1,372만kW)가 운전중이며, 4기(400만kW)를 건설중
 - ※ 고리·영광·울진·월성에 각 4기 운전중, 울진·영광에 각 2기 건설중
-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전력수요가 '98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8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
 - ※ '99년말 현재 원전의 전력공급율은 국내 총전력의 43.1%
- 영광3·4호기를 바탕으로 한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개발·활용하여 가동률 및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제기준(IAEA)상의 사고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으나, 경미한 고장은 1기당 연간 1~2회 발생
 - ※ 안전성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

○ 政府의 原子力 安全對策 推進狀況

- '99년 국정감사시 원전 안전문제가 집중 거론되어 전문가·지역주민·정부 등이 합동으로 일제점검 실시('99. 10~12)
 - ※ 연인원 120명 규모로 2차에 걸쳐 실시
- 원전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 중('99. 12)

○ 原電安全 綜合對策의 主要內容

- 가동중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
 -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 원전기기·부품의 수명관리 강화 및 한전·과기부 등 관계기관간 실시간(real-time) 감시체계 구축

- 원전 운영관리를 강화
 - 한전 본사 및 현장의 안전관련 조직을 보강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
 - 원전 협력업체의 전문화 및 육성 도모
- 안전규제체계 보강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강화
 - 사고·고장시 즉시 보고·공개제도 도입
 - 지역주민 혜택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

○ 檢討 意見

- 원전사고는 발생시 피해범위가 넓고 국민적 공포심이 심한 것이 사실이나, 관계부처의 대비태세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국제적으로도 안전 및 기술수준을 인정받고 있음
- 아울러 원전에 관한 안전대책의 수립·시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으므로
 -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수립한 종합대책이 체계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기획단의 별도 대책검토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 鐵道·海運·航空 安全對策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 現 況

- 항공, 해운분야는 대형사고 발생시 국가적 신인도를 크게 하락시키는 등 파장이 매우 큼
- 소관분야의 조직, 예산 등의 개선방안은 각부처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 推進 對策

-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 안전관리대책을 2000. 3. 15까지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우리 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에 반영

- 소관부처가 제출하는 개선대책은 그동안 다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檢討 意見

- 2000. 3. 15까지 철도, 해운, 항공분야의 안전대책을 소관부처로부터 제출 받아 우리 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보고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부처 주요 개선대책 사례(별첨)

● 交通事故調査 統合 専門機構 設置 (건설교통부 항공국)

○ 現 況

- 교통사고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및 이에 근거한 대책수립의 요구증가(대부분의 교통수단에 블랙박스 설치경향)
- 현재는 교통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을 소관부처에서 담당
- 조사기구별 전문인력 및 장비, 연구자료 부족
- 대형사고 발생시 외국 전문기관에 조사 의존

○ 問題點

- 교통사고율은 세계 1위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 부재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요소로 작용
- 소관부처의 조사담당 및 대책수립으로 객관성, 공정성 시비문제 상존
- 정부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에 애로
- 각 부처별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장비, 연구기관 확보시 중복 투자 및 예산낭비

○ 改善 方案

- 통합된 교통사고조사기구 구성
-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기구로 구성
- 조사전문인력 및 최신장비 확보
 - ※ 외국의 사례(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 NTSB)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교통사고 조사기구
 - 항공, 도로, 해운, 철도 및 파이프라인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수행
 - 적은 비용으로(국민 1인당 연간 15센트 부담) 모든 국민에게 안전한 교통수단 제공을 목표로 운영
 - *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 부분적으로 독립된 항공사고조사기구 운영

○ 期待 效果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중 정부부처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개선요구 가능
- 부처별 사고조사기구의 통합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 전문인력, 최신조사장비 확보 및 유지가능
- 향후 외국의 사고조사 지원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海上交通安全 確保를 위한 改善方案 (해양수산부)

1)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광역 교통관제체제 강화

○ 現況 및 問題點

- 선박통행량이 많은 항만의 선박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14개항만에

항만교통관제방식을 시행중

- 현행 항만교통관제방식은 관제범위가 항만내에 국한하고 있어 항만 부근 및 연안항해선박에 대한 종합적인 선박교통관제가 미흡

○ 改善 方案

-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광역 교통관제시스템 구축 추진필요
- 현행 항만교통관제방식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연계하고 전자해도시스템을 통합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
- 추진기간 : '99 ~ 2003
- 소요예산 : 약 100억원 확보 필요
 - * 2000년: 5억, 2001년: 20억, 2002년: 45억, 2003년: 30억 등

2) 침몰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現況 및 問題點

- 연평균 700여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80여척의 침몰선박이 발생 ('83~'99 기간중 1,431척의 침몰선박 발생)
-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미비로 제2의 해난사고 발생요인 상존 및 해양오염우려

○ 改善 方案

- 침몰선박의 위치조사 및 처리시스템 구축 개발('99~2008)
- 침몰선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시행 등
- 사업기간 : '99~2008(소요예산 : 56억원)
 - ※ 침몰선박 위치조사 용역시행중('99~현재)

3)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도입추진

○ 現況 및 問題點

- 우리 나라 수출·입 해상 운송화물의 약 50% 이상이 위험물로서 해양 사고 발생 위험성 상존

- 우리 나라의 경우 수출위험화물은 선적전 점검시행중이나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인력부족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안전관리 미흡
- ※ 선진외국의 경우(일본, 미국 등)는 '92년부터 점검시행중

○ 改善 方案

-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 도입 시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CIP 점검제도 시범실시(2000. 11. 부산항)
- CIP 시행을 위한 소요인력 확보필요(행정자치부 협조)
- ※ 선박직 15명 : 5급1, 6~7급 13명
- 위험물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추진(2000. 11)

4) 항만국 통제 강화

○ 現 況

- 「아태지역 양해각서」에 의거, 2000. 11월부터 항만국 통제 점검율 75% 달성 추진 의무화(우리 나라의 '99년 점검율 : 23%)
- ※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점검율 37~88% 수준
- 항만국 통제업무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중

○ 問題點

- 항만국 통제 전담인력 부족으로 국제기준에 의한 점검목표 달성 곤란
- 우리 나라 필요인력은 최소 58명이나 현재 28명
- ※ 인접국가의 항만국 통제인력 : 일본(258명), 중국(300명)
-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의무 미이행으로 자국의 위상 실추
- 기준미달 외국 국적선에 의한 해양사고 사전예방 곤란

○ 改善 方案

- 항만국 통제 전담인력 확보추진
 - 전문인력 30명 증원 협조요청(행정자치부)
- 기준미달선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율 지속적 제고
 - '97년(13.7%) → '98년(16.1%) → '99년(23.1%) → 2000년(40%)
2001년(50%) → 2002년 이후 60% 이상 목표
- 항만국 통제 관련 국제협력 강화(IMO 및 항만국통제위원회 참가)

5) 안전관리조직 개편 및 기능보강

○ 現況 및 問題點

- '99. 5 정부조직개편으로 종전의 안전관리관실 4개과중 1개과(선박 관리 담당)를 감축하고, 타국(항만정책국)의 항로표지과를 이관 받아 현재 4개과로 운영중
 - ※ 감축된 업무는 3개과(안전계획과, 해사기술과, 해양방재과)로 분산 통합
- 현행 안전관리조직 및 운영체제로는 국제적인 해양안전 정보파악, 해양 안전정책의 개발, 총괄안전행정체제 구축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수행 미흡
- 현재 해운물류국에서 관장하는 항만교통관제는 항만운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어 안전관리 기능이 취약하고, 선박교통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곤란

○ 改善 方案

- 안전관리관실을 “해양안전관리국”으로 개편하여 선진국형 해양안전체제를 확보하고 안전업무의 효율성 제고
 - ※ 일본의 경우 운수성에 해상기술안전국(7개과, 2담당관)으로 운영
- 안전관리관실에 “해상교통과”를 신설

- 항만교통관제업무를 이관(해운물류국→안전관리관)하여 선박 자동식별 장치와 연계한 광역관제시스템 구축 등 해상교통안전관리개발 업무수행

● 鐵道건널목 改良 및 團束強化 (철도청)

○ 現 況

-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철도건널목 시설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고 건널목 통행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問題點

- 운전자의 위법통행 급증
- 교통안전표지 및 시설물 부족
- 건널목 입체화 부진

○ 改善 方案

- 철도건널목 입체화 확대
- 건널목 안내원 및 철도원에게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권한 부여
- 건널목 안전시설 현대화

구 분	총대상	기설치	2000년 계 획	2001년 이 후	비 고
출구측차단간 검지기(개소)	774	2	38	734	연차적 확대시행
소요예산(억원)	154.8	0.4	7.6	146.8	'99년 단가

- 건널목 접속도로 정비 및 건널목 예고표지 설치(도로관리청)
- 각종 교통안전표지 및 취약개소에 점멸경고등 설치(경찰청)
- 철도건널목 합동안전점검 제도화

2. 관련기관 견학

가.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 일시 : '00. 3. 9(목)
- 견학 내용 : 공항주요시설(관제탑, 터미널) 등 주요 건설현장 견학 및 현황과악



나. 한국고속철도 공단

○ 일시 : '00. 5. 17(수)

○ 견학 내용 : 고속전철 시승 및 용접공장 견학, 터널공사 현장 방문



3. 자문위원회 개최

가. 제1차 자문위원회

- 일시 : '99. 12. 1(수) 15:00
- 주요내용 : 기획단 및 자문단 운영방향에 대한 토의

나. 제2차 자문위원회

- 일시 : '99. 12. 8(수) 14:00
- 주요내용 : 업무범위 선정에 대한 자문
조직개선, 제도개선, 안전운동 등 팀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다. 제3차 자문위원회

- 일시 : '99. 12. 13(월) 14:00
- 주요내용 : 업무범위 선정에 대한 자문
조직개선, 제도개선, 안전운동 등 팀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자문

라. 제4차 자문위원회

- 일시 : '99. 1. 21(금) 16:00
- 주요내용 : 분야별 검토자료에 대한 자문

마. 제5차 자문위원회

- 일시 : '00. 3. 15(수)~3. 28(화)
- 주요내용 : 우선추진과제 시안에 대한 자문

바. 제6차 자문위원회

- 일시 : '00. 5. 24(수) 16:00
- 주요내용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및 중장기안 검토

자문위원 명단

성 명	현 직 위	주 요 경 력	연 락 처
정 동 남 (50.11.7)	한국구조연합회 회장	KBS 텔런트 구조·구급활동 전문가	011-246-7777
김 동 욱 (59.12.25)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오하이오 주립대 행정학(박사)	880-5628 019-350-5628
김 찬 오 (53.7.30)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한양대 전기공학(석·박사)	970-6375 017-202-1070
김 태 환 (59.9.11)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일본 요코하마대 건축학(박사) 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0335-330-2856 011-792-4214
김 호 영 (64.6.1)	OCSE-GBI총괄이사	연세대 사회학과 미국, 독일 소방과정 이수	558-3003 508-1119
박 연 수 (53.12.8)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 운영국장	내무부 재난총괄·방재계획과장 연세대 공학박사	783-8563
윤 명 오 (58.1.29)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동경대 공학(박사) -건축, 도시방재	2245-3119 011-9704-5042
윤혜철 (48.8.4)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도시계획학(석사) KIST, 한양대 도시공학(박사)	0343-380-0159 018-312-3232
오영태 (55.10.1)	아주대 환경도시 공학부 교수	서울대 도시계획학(석사) 미 폴리테크닉대 교통공학(박사)	0331-219-2537
이승원 (56.3.31)	한국방송공사(KBS) TV1국 부주간	한양대 TV제작센터 위성방송제작 부주간	781-3530
이영지 (64.4.2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회개발부장	숙명여대 경영학(석사)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실무위원(현)	794-4560
정 재 희 (52.3.14)	안실련 사무총장 (서울산업대 교수)	중앙대 전기공학(박사)	970-6376 016-304-6000

4. 관계부처 회의

가. 과장회의 개최(주요추진과제, 부처협의사항)

1) 일시 : '00. 4.24(월)

2) 참석 : 행정자치부 외 8개 부처

3) 주요 회의내용

○ 1차

- ① 도시부 보차 혼합도로 속도제한 도입(경찰청)
- ② 택시 영수증 발급기 부착 의무화(건교부)
- ③ 도로안전진단제도 도입(건교부)
- ④ 자동차 반사번호판 도입(건교부)
- ⑤ 교통행정기관 교통전문인력 확보(행자부)
- ⑥ 시민안전신고제 활성화(행자부)
- ⑦ 안전문화 체험공간 확보 운영(행자, 노동, 문광부, 경찰청)
- ⑧ 재해·재난관련 법률 일원화(행자부)
- ⑨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체제 전면 개선(행자부)

○ 2차

- ① 건설하도급 제도의 개선(건교, 재경부)
- ② 건설감리체계 통합운영(건교부)
- ③ 건설분쟁 조정기능의 강화(건교부)
- ④ 유해·위험물질 사고대응 정보센터 설립·운영(환경부)
- ⑤ 산재관련법에 제3자 보호규정의 신설(노동부)

나. 국장회의 개최(주요추진과제, 부처협의사항)

대형사고 방지와 시설안전대책 마련 등 「인위재난 분야」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 주요 개선대책 수립 및 부처간 협의 사항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

- 1) 일 시 : '00. 6. 28(수) 16:30
- 2) 장 소 :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10층 1018호)
- 3) 참석부처 :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병무청
- 4) 회 의 주 재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 5) 회 의 내 용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 주요개선대책(26건)
 - 다중이용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외 25건
 - 부처별 협의사항(12건)
 - 국가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안전법률 제정 외 11건

5. 공청회 개최

가. 1차 공청회

- 1) 일시 : '00. 5. 9(화)
- 2) 장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 3) 참석 : 약 500명
- 4) 공청회 진행순서

- 개회식 [13:30~13:40]
 - 인사말 (단장 : 황용주)



- 축사(국무총리)

- 제 1 부 - 주제발표 [13:40~14:00]
 -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 개요 및 방향 발표 (부단장 : 이명수)

○ 제 2 부 - 분과별 토론 [14:00~16:30]

- 1분과 (2강의실) 사회자 : 김찬오 교수

- 주제 1 :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방지 방안(손병석 팀장)

패널리스트 : James W. Lee 사장, 이상호 박사

- 주제 2 :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윤명오 교수)

패널리스트 : 손병석 팀장, 김상욱 소장

- 2분과 (3강의실) 사회자 : 도철웅 교수

- 주제 3 : 도로교통안전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설재훈 팀장)

패널리스트 : 오영태 교수, 배한성 방송인, 김서영 원장

- 주제 4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황우찬 팀장)

패널리스트 : 정재희 교수, 장석민 박사, 김인태 의장



○ 제 3 부 - 종합토론

- 종합 패널토의 및 참관자 질의답변

(최동섭 前건설부장관, James W. Lee 사장, 윤명오 교수,
오영태 교수, 정재희 교수, 이명수 부단장)



나. 2차 공청회

1) 일시 : 2000. 7. 13(목) 13:00~17:30

2)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3) 참석 : 약 300명

4) 공청회 진행순서

○ 제1부 안전연대 창립대회 【13:00~13:40】

- 개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 안전처리
- 조직구성 / 사업계획 보고
- 대회사 : 은방희(여성단체협의회장)
- 축사 : 이남주(YMCA전국연맹사무총장)
- 성명서 발표 / 실천 결의문 / 폐회

○ 제2부 국민안전을 위한 시민 공청회 【14:00~17:30】

- 개회사(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송자 대표)
- 축 사(안병우 국무조정실장)
- 기조 연설 1 : 최병렬 국회의원
“우리사회의 안전, 이대로는 안된다”
- 기조연설 2 : 황용주 안전관리대책기획단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 주제 발표 1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의무소방대 신설의 당위성”
- 주제 발표 2 : 송재웅 시민문화발전모임 운영위원장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생산 절차의 투명화”

- 주제 발표 3 :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재원(교통 범칙금)확보방안”
- 사회자 : 최동섭 행정개혁시민연합 고문
- 토론자 : 주제 1 : 이수경 서울산업대 교수 · 정동남 한국구조연합회장
주제 2 : 이상호 건설기술연구원 박사 · BSWO호 현대건설 이사
주제 3. 오영태 아주대 교수 · 설재훈 바른운전자들의 모임대표
- 종합토론 : 방청석과 질의토론

安全連帶 創立大會 및 國民安全增進 公聽會 結果 報告

■ 全般的인 雰圍氣 및 總評

- 안전관련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연대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상임대표는 송자, 은방의, 이남순, 고문은 황용주 안전관리대책기획단장
- 창립총회는 개회, 경과보고, 안전처리, 조직구성, 대회사, 축사, 어린이 호소문 낭독, 성명서 발표 및 실천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찬주 어린이의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는 글」을 낭독할 때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음
- 창립총회 이후 개최된 공청회에는 250여명의 많은 방청객이 참석하고 토론 종료시까지 진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
 - 특히 각종 시민단체 회원들과 안전관련 이해 관계인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
- 토론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는 경향이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

- 발표 및 토론이 자유로웠으며 방청석 의견개진, 질문과 건의 등 참여가 적극적이었음
- 안전연대가 채택한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기구의 설치와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라.
 - 교통범칙금은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하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라.
 -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의무소방대를 신설하라.
 - 감리제도 강화를 통한 안전시공을 확보하라.
 - 일천만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 안전연대 실천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나부터 「시민안전 지도자」 교육을 받고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안전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 나는 안전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사고 예방법을 홍보·교육하는 등 안전을 생활화하겠다.
 - 나는 우리 주변 사고취약지점을 제보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겠다.
 - 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월 1회씩 생활 안전 가족회의를 개최하겠다.
 -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며, 운전 중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겠다.

■ 基調演說, 主題 發表 및 討論

기조연설 1	최병렬 부총재
--------	---------

- 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시민 어느 누구하나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음. 결국 안전은 시민이 나서야 할 사항임

- ②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③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④ 교통법칙금을 교통안전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⑤ 건설공사의 문제는 엄격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⑥ 안전연대가 앞으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활동하여야 함

기조연설 2	황용주 안전연대 고문
--------	-------------

- ① 신용사회만이 안전을 높일 수 있고 안전은 시민사회의 지표임
- ② 그동안 경제성장에만 치우쳐 안전을 도외시하였음
- ③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작은정부, 시장경제원리, 현장 대응 등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음
- ④ 통행우선권의 확립을 통해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해야 함
- ⑤ 안전에 관한 각종 법률이 전문화, 계열화되어 있지만 상호 보완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⑥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는 기존 기능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함
- ⑦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을 위해 모든 절차가 투명화되어야 함
- ⑧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부처회의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 제 1 주제 : 의무소방대 신설의 당위성

(발표자 :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 ① 한국적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소방력을 실체화하기 위한 소방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고 적합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광역소방과 기초자치단체의 상보적 역할분담을 구축하며, 동시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이미지로서의 의용소방대 매력창출이 필요함
- ②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로 해결되지 못하는 정규소방인력의 확충방안으로 의무소방제도의 신설과 의무소방제도를 통해 배출된 출신자가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③ 결론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와 의무소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토론 1

이 수 경

- 선진화된 소방으로 가는 방법 중에서 최근 논의되는 것은 성능 위주의 소방설계 개념임
- 의무소방대나 의용소방대 등도 선진소방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함. 그러나 정규직 소방대원을 줄이기 위해 의무소방대를 신설하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소방대는 매우 필요함
- 실질적인 의무소방대의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측면에서의 자치소방 등이 중요함

토론 2

정 동 남

- 현재 정부조직은 구조조정으로 안전관련 조직과 인력이 줄어들었으며, 소방과 관련하여 100% 공무원화 되어 있어 민간인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서 좋은 개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힘이 매우 중요함
- 의무소방대는 전투경찰과 같은 것으로 이들을 소방에 활용해야 함
- 재난시 소방관서장에게 통제권이 있으나 소방관서장의 직급이 낮아서 통제권이 발휘되지 못하므로 소방관서의 직급을 높여야 함
- 전문인력을 포함한 인력부족 상황에서 의무소방대 설치가 필요함

청중 1

- 소방하면 불끄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소방이라는 이름부터 포괄적인 새로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함

청중 2

- 의무소방대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곳에도 설치되었으면 함

○ 제 2 주제: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생산 절차의 투명화

(발표자 : 송재웅 시민문화발전모임 운영위원장)

- ① 건설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협업이 잘 되는 선진국임. 건설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설생산절차가 투명화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② 건설 CALS의 구축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부 각 유관 부처의 CALS구축조직에 참여할 부처를 선정 공표하고,
 - CALS 구축 중심목표를 현실성 있도록 재조정하며,
 - CALS에 적용할 국가표준화를 서두르고 CALS에 참여조직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며,
 - CALS 구축후 국제간 교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간 정보 교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토론 1

이 상 호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의 중요한 문제는 입찰에 있음. 감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입찰은 기술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 건설생산절차를 투명하게 하는데 CALS가 필요함.

토론 2

윤 재 호

- 기획을 하는 사람은 현장 시공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기획자는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CM회사에게 넘겨야 함.
- 시공사와 종합건설업체 등 건설업체간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
- 건설 CALS의 경우 양보다 질이 중요함. 건설산업의 경우 인허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임.

청중 1

-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CALS를 통해 전자거래가 되고, 전자거래를 활용하여 모든 자료의 기록화가 가능함
- 도로, 항만, 댐 등만이 사회간접자본이 아니고 설계와 시공 및 각종 지질 자료 등과 같은 자료들이 모두 사회간접자본임. 소프트 사회간접자본에서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청중 2

- 우리의 입찰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건설CALS와 같은 것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며, 기술력이 기준이 되어 입찰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함

- 현장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제 3 주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방안

(발표자 :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사업실장)

- ①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교통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조사대상자의 96%에 이르고 있음
- ② 운전자의 78.3%가 교통범칙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고 있음
- ③ 교통범칙금이 교통안전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음
 - 국민이 원하고 있음
 -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재원만 있으면 사고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효용가치가 월등히 높고 정부는 「선례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④ 특정 세입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기획예산처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강변에 불과함. 교통범칙금을 이용하여 사범부 건물을 지을 당시 특별회계로 처리되었음

토론 1	오영태
------	-----

- 교통범칙금이 교통안전에 투자되어야 함
- 교통안전을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임.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안전시설에 대한 전문적 관리조직이 필요함
-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보상해야 할 규모가 클 경우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와 도로관리 일원화 및 기술력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함

토론 2

설 재 훈

- 우리 나라는 사고다발지역이 많고, 안전시설이 미비함
- 사고처리 기준이 모호하고, 체험관도 부족하고 언론 홍보도 부족하고, 제도도 미흡하며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함
-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교통범칙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교통 범칙금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활용하면 됨

○ 기타 토론

청중 1

- 많은 사고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음.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함.
- 씨랜드 참사유족회에서는 어린이 안전재단을 설립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 후속조치 및 行政事項

-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관리종합대책(안)에 반영하고자 함
 - 「의무소방대 설치」와 「건설생산절차의 투명화」 및 「교통안전투자재원 확보(교통범칙금 활용)」 등을 개선안에 적극 반영
 - 엄격한 감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마련
 - ➡ 엄격한 감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개선안 마련
 - ➡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 설치, 보호장구 착용의무화 및 놀이동산 안전관리 강화 이외의 추가 개선안 검토
 - 안전문화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 ➡ 안전관련 재단 설립시 각종 인센티브로서 세제혜택과 정부와 기업의 출연 등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6. 연구용역 및 연구과제 결과 요약

가.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요약(총 4건)

1) 건설생산절차의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고
○입찰·계약분야 개선방안 강구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도입 ○복수예정가격 적용 확대 시행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일반 · 전문업체간 공동 도급할 수 있도록 반영 ○복수예정가격 적용을 주요 발주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부정·비리 차단토록 반영	대책 반영
○시설물 관리 분야 개선방안 강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 제안	○전문유지관리 주체에 의한 시설물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법 제정 방안 검토	
○건설사업 정보화 기본방향 제시	○건설CALS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추진전략 제시	○건설CALS조기구축방안으로 - 입찰계약 전자처리시범 사업 실시 - 건설CALS사업의 단계적 추진전략 반영	
○인·허가, 감독 분야 개선방안 강구	○인·허가 업무 전자 처리화 및 사용 검사 기능 강화방안 제시	○인·허가업무 전자처리 시 범사업 확대실시방안 반영 ○사용검사시 품질확인 가능 반영	

2) 교통사고 피해자 실태조사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연대)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 교통사고 피해자와 관련 사고조사, 보험처리, 응급구조체계 개선방안 제시	○ 교통사고처리제도 개선 및 보험제도개선 등	○ 교통사고 처리유형 세분화 · 투명화 ○ 물피사고 보험처리 종료 제도 도입 등	○ 대책 시안

3) 건축물 소방·방재기준 선진화방안 연구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 용도변경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대책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확보방안 ○ 내장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 화재위험도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방안 ○ 건축~소방법령간 합리적 조정방안과 소방규정의 보강 방향 ○ 피난시설기준 보강 방안	○ 소방동의 누락대상에 방화대상물 신고제 실시 ○ 신공법 채용건축물 등에 대한 방재계획심의제 도입 ○ 인테리어설계사제 신설 및 소방시설관리사제도 개선 ○ 거주인 특성에 기초한 건축물 용도분류 실시 ○ 내장재규정의 이관, 방화·배연 등에 관한 소방법령의 시설기준 보완 ○ 피난구의 크기, 방향 등에 대한 세부기준 보강 ○ 다수인 거주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비 보강 ○ 주요공공시설물의 공학적 설계 미흡	○ 방화대상물 신고제 실시 ○ 방재계획심의제 도입 ○ 인테리어설계사 제도 도입, 관리사 제도의 확장·발전 ○ 거주인 특성에 기초한 11종의 용도분류 실시 ○ 건축법의 미비, 불완전 사항을 소방법령이 보강하여 방화계획심의 실시 ○ 피난에 관한 안전공학적 세부기준 보완 ○ 스프링클러의 설치대상 확대 ○ 일괄입찰심의시 방재성능의 우열을 평가에 반영	대책 반영

4) 국민안전의식 실태조사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정도 ·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도 등 ○ 안전사고 예방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회/국가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정도 등 ○ 안전사고 예방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조치 정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등 ○ 안전사고 예방 노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개개인/정부감독기관/언론/시민단체의 안전사고 예방노력 정도 등 ○ 주요 안전사고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을 느끼는 주요 안전사고 · 교통법규 위반정도 및 이유 등 ○ 안전관련 규범/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수준 분석 및 종합진단 ○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지속적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 안전운동 추진조직체계 정비 ○ 학교안전교육의 체계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시안 및 백서 ○ 대책시안 ○ 대책시안 ○ 대책시안 ○ 우선추진 과제

나. 연구과제 보고서 결과 요약(총 9건)

1) 건설계약 및 분쟁조정 합리화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 건설공사 하도급 제도 개편방향 제시	○ 직접 시공비율제도 제시	○ 계약 담당 공무원이 입찰시공사의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 일정비율(주공종 등)이상의 직접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반영	대책 반영
○ 건설공사 계약 서류의 법정화 방안검토	○ 계약문서의 법적 기속력 강화 방안 제시 - 계약문서 상호간 우선 순위 명시	○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 산출 내역서를 법적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포함 시키도록 반영 - 계약문서간의 우선순위 명시 - 계약문서의 표준화	
○ 건설분쟁 조정 기능의 합리화 방안	○ 건설분쟁조정 특별법 제정 제시	○ 건설분쟁 및 분쟁해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민간주도의 “건설분쟁중재원”을 설치토록 반영	
○ 기타	○ 감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 감리방식의 다양화와 발주자의 선택권 보장 - 감리제도 일원화 방안	○ 발주청의 능력과 공사규모·특성 등에 따라 감리방식을 다양화하는 공종별 감리, 검측감리 및 CM방식도입 반영 - 동일공사에 한해 종합감리제 도입 - 감리관련 법령의 통합방안 도입	

2) 소방설비 공사품질 확보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방재 설계 품질 제고방안 ○소방공사업의 하도급 관행의 개선방안 ○소방시설 공사의 효율적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방재설비 설계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성능에 관한 가상실험데이터 등을 소방동의시에 제출토록 함 ○소방공사정액제, 분리 발주제, 절대공기 보장제 실시 ○감리자의 독립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감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재위험성이 큰 건축물에 대하여 방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설계수준 향상을 도모 ○하도급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분리발주, 절대공기보장 유도 ○소방설비공사 감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인력·기간 등의 명확화 	대책 반영

3)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참여 확대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시민 참여 방안 ○생활안전신고센터 정착화 방안 ○범국민 안전협의회 설치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 단체의 역할 ○시민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안전현장 제정과 국민안전교육 · 국민안전평가위원회, 안전신문고, 시민안전 대상 신설 운영 · 국민안전테마파크 설립 · 시민안전운동 네트워크 구성 · 안전기금 설치 또는 수익사업 ○인센티브제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안전 신고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안전의식 함양 및 참여 유도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민의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생활안전 자원봉사자” 활동 촉진 ○“국민안전의 날” 제정, 운영 · “국민안전현장” 제정 · 선포 ○안전문화 체험공간 확보 운영 ○시민단체 지원 및 연계활동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추진 과제 ○대책시안 ○우선추진 과제 ○대책시안 ○대책시안 ○대책시안

4)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제시	○특정시설구역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확대적용 외 10건	○특정시설구역내 도로의 도로교통법 적용 ○동승자의 준수사항 규정 신설	○대책시안 ○대책시안

5)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보험료 할인·할증 및 제도 개선방안 제시	○사고건수에 연동한 보험료 차등화 방안 등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폭 확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차등화 방안 보완	○우선추진 과제 ○대책시안

6)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과학장비 활용 및 안전시설·업무의 민자유치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첨단 교통단속 장비 확대 및 단속업무 효율화 방안 제시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단속방안 등	○과학장비를 이용한 상시 교통단속체계 확립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대책시안 ○대책시안

7)交通安全 개선을 위한 행정관리체계 구축 및 인력전문화 방안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교통행정 및 안전 관련 전문공무원 확보방안 제시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개선(안) 등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전문 인력 확보 ○공무원 시험에 교통 관련 과목 추가	○대책시안 ○대책시안

8) 중앙·지방정부 안전관리조직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중앙·지방정부 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정부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파악 ○중앙정부·지방자치 단체간 재난관리 역할, 분담방안 제시 ○재난관리체계상의 세부개선안 제시	○지방재난관서를 기획부서 또는 총무 부서에 설치하도록 권고 ○민간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대책반영

9)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요 구 사 항	주 요 내 용	반 영 결 과	비 고
○현행 의용소방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 발전방안 마련	○의용소방대원 임기, 연령 ○의용소방대원 복제 등	○소방공무원 현장대응 능력 강화의 방안으로 교육철저 실시와 장기 방안으로 의무소방대 설치안 제시	

부 록 편

1. 기획단 설치근거 및 배경 / 299
2. 기획단 구성 / 300
3. 기획단 운영계획 / 301
4. 기획단 현판식 / 305
5. 기획단 해단식 / 306
6. 기획단 운영일지 / 307
7. 언론 보도집 / 313
8. 안전관리 홈페이지 운영현황 / 337

1. 기획단 설치근거 및 배경

■ 설치근거 : '99. 11. 2. 대통령 지시

※ 총리훈령 제400호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운영규정」('2000. 2. 2)

■ 설립배경

- 최근 씨랜드('99. 6. 30), 인천 노래방 화재사고('99. 10. 30)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 대통령께서 작년 11. 2 국무회의시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일대전기가 되도록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관합동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1999. 12. 1~2000. 7. 31)
 - 단장에는 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12명의 자문위원을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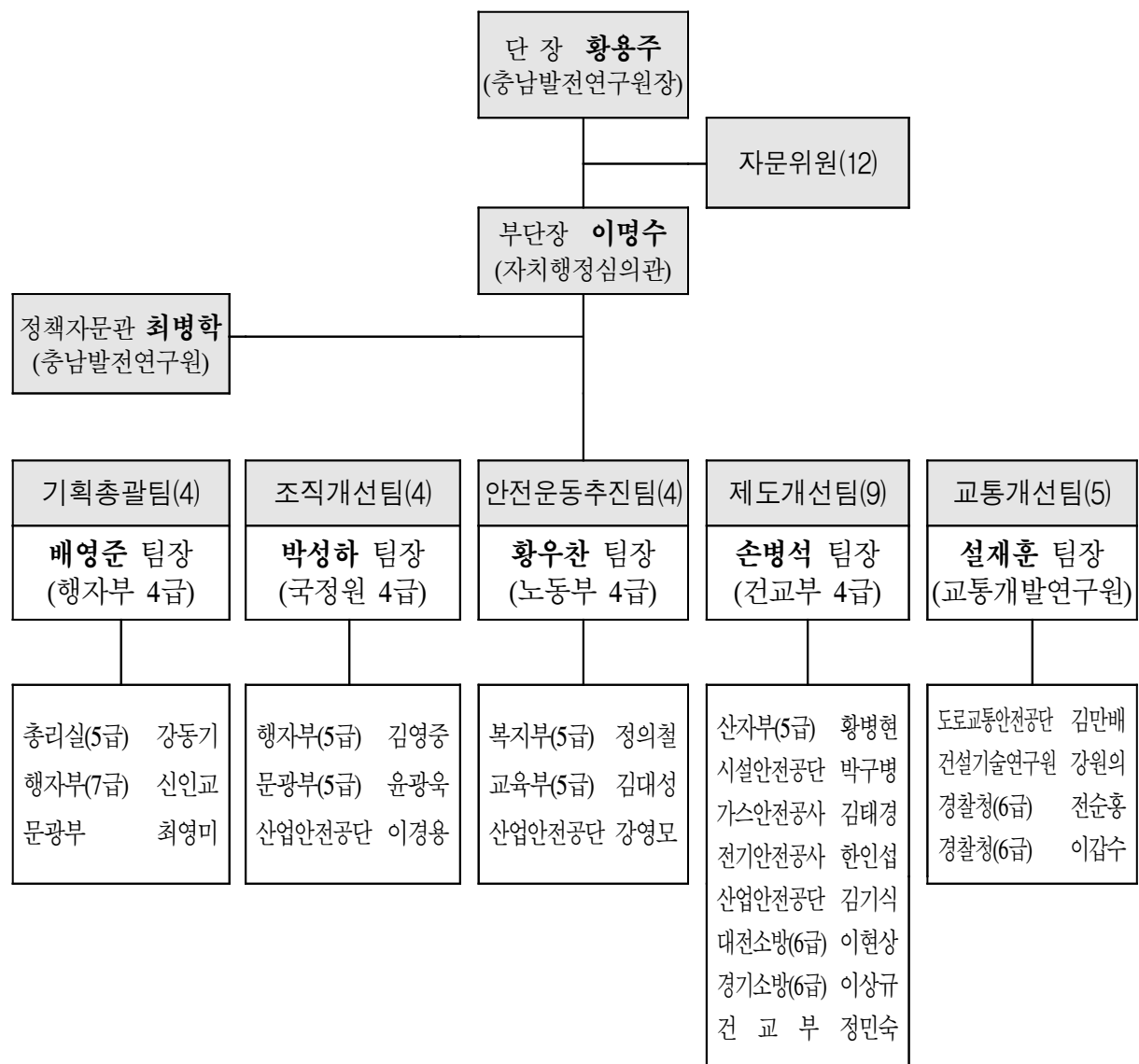
2. 기획단 구성

■ 인원 : 29명(단장 1, 부단장 1, 정책자문관 1, 팀장 5, 단원 21)

○ 공무원 : 12개 부처 18명

○ 민간인 : 8개 기관 11명(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 안전관리대책기획단 기구표



3. 기획단 운영계획

가. 必 要 性

- 씨랜드 화재사고('99. 6. 30), 인천노래방 화재사고('99. 10. 30)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
 - ※ 상기 화재사고 모두 관련 공무원과 업주간의 유착, 업주의 불법영업, 이용객의 안전의식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이를 계기로 안전개혁차원에서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 안전관련 조직 체계 검토, 관련법령·제도개선 방안 등 마련·추진 필요

지시 말씀

-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동절기 대비 유사사고 재발방지('99.10.31, 대통령)
- 우리사회에 안전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일대전기가 되도록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내각전체가 계획 수립('99.11.2, 대통령, 국무회의)
-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화재·산불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철저('99.11.1, 국무총리)

나. 基 本 方 向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전의식 부재로 인한 人災性의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 강구
 - 현행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후 개선방안 마련
 - 국민의 안전의식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 등 의식개혁운동방안 강구
 - 효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내 안전관련 조직체계 정비 등

- 각 부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민간인 등)로 구성되는 「기획단」을 구성
 - 자문단 구성 활용 및 공청회 적극 활용
- 근원적·종합적 안전대책의 기본틀 마련, 대통령 보고후 소관부처별로 관련 후속조치 추진
 -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속 관리

⇒ 화재 등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안전관리대책기획단(가칭)」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다. 「安全管理對策企劃團」設置・運營

1) 推進 體系

■ 총리실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하여 한시적으로 운영

- 명 칭 : 「안전관리대책기획단」

■ 조직 및 기능

- 기능별로 3개반을 구성·운영하되 다음의 업무를 수행
 - 기획총괄반 : 기획조정, 안전조직 및 체계 정비, 행정지원
 - 제도개선반 : 법령·제도 개선방안
 - 안전운동추진반 :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의식 제고방안

■ 구 성

공무원과 민간인 합동으로 기획단 구성

- 단 장 : 민간전문가
- 부단장 : 자치행정심의관
- 단 원 :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27명)
 - 공무원 : 관계부처의 파견인력 18명
 - 4급 4명, 5급 6명
 - * 사무지원 : 7급 1명 및 여직원 2명
 - 민간전문가 :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 파견 활용

2) 綜合對策案 마련

향후 「근본적·종합적인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틀 마련

- 안전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개선방안
 - 분산·중복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정비 방안
 - 안전관련 규제사항 검토(필수 안전관련 규제 신설 등)
 -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 강구 및 추진틀 제시
 - 기존의 「제2건국운동」, 「월드컵 문화시민운동」과의 연계방안 등 검토
 - 안전문화운동 추진체계 구성 등
 - 정부내 안전관련 조직체계 정비
 - 이원화되어 있는 재난/재해 관리체계 통합 여부
 - 미국의 FEMA식 안전관리기구 설치
 - 부처별 안전관리조직 강화방안 등도 검토
-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표본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종합대책안에 반영

다. 向後 推進

- 「기획단」에서 「근본적·종합적인 안전대책(안)」 마련후 공청회 등을 거쳐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기본계획 확정
- 확정된 대책(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보고후 대통령 재가·확정
- 소관부처별로 관련 후속조치 추진
 - ※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4. 기획단 현판식



- 일 시 : '99.12.1(수)
- 장 소 : 정부합동청사(창성동)
- 참 석
 - 국무조정실장, 황용주 단장, 이명수 부단장 등 30여명
 -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 등 6명
- 행사진행
 - 현판식→기념촬영→다과회 개최

5. 기획단 해단식



- 일 시 : 2000. 5. 30(화)
- 장 소 : 정부합동청사(창성동)
- 참 석
 - 황용주 단장, 이명수 부단장 등 28명
- 행사진행
 - 해단식 → 다과회 개최

6. 기획단 운영일지

● '99.12.1~12.31까지 추진실적

- 1999. 12. 1. 안전관리대책기획단 발족, 현판식
 - 합동청사 205호, 18개 부처·기관 29명, 자문단 12명
- 1999. 12. 1. 제1차 자문회의 개최(5명)
 - 기획단 및 자문회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
- 1999. 12. 8. 제2차 자문회의 개최(6명)
 - 업무범위 및 팀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 1999. 12. 13 제3차 자문회의 개최(6명)
 - 업무범위 및 업무추진과제에 대한 최종협의
- 1999. 12. 17. 37개 관계부처·기관에 추진상의 문제점 등 관계자료 제출요청

● 2000.1.1~1.31까지 추진실적

- 2000. 1. 10. 연구과제 발주
 - 「중앙·지방정부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등 9건
- 2000. 1. 21. 제4차 자문회의 개최(10명)
 - 발족후 정리·검토해 온 개선대책에 대한 자문 실시

● 2000.2.1~2.29까지 추진실적

- 2000. 2. 2.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운영규정 총리재가(총리훈령 제400호)
- 2000. 2. 15. 총리실 홈페이지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사이트 개설
- 2000. 2. 21.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수립상황 총리보고

- 분야별 우선추진과제, 주요 종합대책(안) 등

● 2000.3.1~3.31까지 추진실적

- 2000. 3. 9.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현장 방문견학
- 2000. 3. 15. 연구용역 발주
 - 「건축물 소방·방재기준 선진화 방안연구」 등 3건
- 2000. 3. 16. 제5차 자문회의 개최(10명)
 - 우선추진과제 및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자문 실시
- 2000. 3. 27. 우선추진과제 총리보고 및 관계부처 시행(국무총리지시 제13호)
 - 다중이용 취락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과제

● 2000.4.1~4.30까지 추진실적

- 2000. 4. 10. 13개 부처 안전담당 주무과장 회의개최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업무협의
- 2000. 4. 25~26. 종합대책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회의
 - 6개 부처 담당과장 10명, 83개 과제중 「건설하도급 제도개선」 등 12개 과제 대상
- 2000. 4. 27. 「2002년 기준 전후 할 일」에 대해 총리보고
- 2000. 4. 28. 대국민 홍보용 「안전만화」 제작 보급
 - 10만부 발간, 시도별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 (5. 4) 이용 배포

● 2000.5.1~5.31까지 추진실적

- 2000. 5. 9. 공청회 개최에 따른 여론수렴(중앙공무원교육원, 500여명)
 - 인사말, 격려사, 주제발표, 분과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
- 2000. 5. 12. 우선추진과제 추진상황 보고
- 2000. 5. 17.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방문견학
- 2000. 5. 24. 제6차 자문회의 개최(8명)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중장기 추진과제에 대한 자문 실시

● 2000.6.1~6.31까지 추진실적

- 2000. 6. 1.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요약안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보고
- 2000. 6. 9. 국가안전관리 요약안 총리보고
- 2000. 6. 28. 1급 관련부처 회의

● 2000.7.1~9.30까지 추진실적

- 2000. 7. 13. 안전연대 공청회 개최(상공회의소, 300여명)
 - 인사말, 치사, 주제발표 등
- 2000. 8. 24. 차관회의
 - 안전관리종합대책
- 2000. 9. 4. 국무회의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박태준 국무총리 지시 친필 메모)

2000년 3월 21일
로 하여금 하하 제21일

國家安全管理綜合對策
「優先推進課題」報告

가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한데 대해 내각을 지도
한데 대해 내각을 지도

2000. 3. 21

특히 7월 21일 2000년 3월 21일
특히 7월 21일 2000년 3월 21일

安全管理對策企劃團

4월 21일

2

총리 지시관련 보고

2000. 4.27

안전관리대책기획단

200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전후에 할 일들이 조직
으로 시행되어 나가도록 할 것(총리지시 2000.3.21)

□ 추진 기본방향

- 2002년 월드컵대비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
- 『작은정부 지향』 『시장경제 원리도입』 『현장중심』 등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교통문화 확립 추진
- 『교통관리의 과학화』 『시민참여확대』 『인위재난 으로 부터의 삶의 질 향상』 위주로 시행

□ 추진 주요전략

- ① 가칭 『월드컵 교통신화 만들기』 등 시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국민적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 현행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산하에

설
치
위
기
제
치
조
보

사무국 설치운영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조정

- ② 시민단체의 조직적 체계적 안전운동을 위해 『시민단체 총연합회』 발족

- 교통안전분야, 산업안전분야, 가정안전 분야 등 포함

후행각각각각각각각각각각

□ 향후 추진계획및 건의

-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 정비
 - 34 개의 안전관련 개별법의 일부 통폐합 및 재정비
- 교통관련 부처 『기능 및 조직』 조정
- 2002 년까지 체계적인 교통안전문화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 개발
 - 정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 토록함.
- 분산되어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통합조정
 - (조사,계획,설계,건설,운영의 체계화)
 -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지속적 점검 및 평가
 - 교통안전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 안전관리 대책기획단 운영기간 일부조정(당초 2000.5.31까지)
 및 『기획단』 조직 재편성 운영 검토
 (인원 15명 내외, 연장기간 2000. 12. 31, 소요예산 1억원)

※ 교통안전 및 인위재난 관련법 재정비 이외 안전관리 근본 대책은 2000. 5. 31 까지 보고후 종료 하되, 2002 년까지 우선 추진과제를 중점시행 하고 중장기 대책은 단계적인 발전및 지속적으로 추진함.

7. 言論報道集('99.12.1~2000.7.31)

완화된 안전관련 법·제도 재검토(1999.12.6)

인천 호프집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완화된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장 선임 및 자문위원 위촉, 현판식 등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 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1일 기획단장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어 정부합동청사 정문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본법' 입법청원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 차원에서 각 개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총괄, 통일시킨 '사업장안전보건 관리기본법안'을 마련, 지난 2일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쳤으며 새로운 체계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안전보건관리기본법'안을 마련, 정세균 의원(국민회의) 등 9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아 2일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 1999.12.16/515호 안전신문 박창환 기자 >

안전관리대책기획단장 황용주씨 임명...정무 (1999.12.2)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 황용주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우선 연말까지 안전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를 끝내고 내년 1월 안전관리 종합대

책 개선안 골격을 마련한 뒤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께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김태환 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경뉴스 >

‘안전관리 기획단’ 내년 5월까지 한시 운영 (1999.11.16)

정부는 15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안전관리대책 기획단”을 구성,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민관 합동의 안전관리대책 기획단을 구성해 6개월간 운용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공청회 등을 거쳐 2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민간 전문가와 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관련 공무원 13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민간전문가가 맡게 된다.

기획단은 산하에 기획총괄반, 제도개선반, 안전운동추진반 등 3개 팀을 두고 ◇안전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 개선 ◇안전문화운동 등 안전의식 강화 ◇정부내 안전관련 조직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총리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설치 (1999.12.1)

<김경도>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 황용주(黃鏞周)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내년 5월까지 6개월여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인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실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구체적으로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안전관련 조직체계를 만들고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우선 연말까지 안전관련 현황과 실태조사를 끝내고 내년 1월 안전관리 종합대책 개선안의 골격을 만든 뒤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께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 의견·제보 politics@mk.co.kr 1999.12.1(수) >

건설 안전관리 전문가 제안 (1999.12.9)

새천년의 안전관리는 안전의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한 압축성장시대에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이 실천과제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확보가 지상과제가 된 시대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유·무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연세대 조원철(趙元喆) 토목공학과 교수(수해방지대책기획단장)는 “미국의 경우 방재비용으로 한해 1억달러를 투자해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우리도 사후약방 식이 아닌 예방사업 중심으로 안전행정을 펼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이창수(李昌洙) 토목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건설보다 유지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으나 우리는 반대” 라면서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분야의 표준화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황용주(黃鏞周) 중앙대 건설

대학원 교수는 “부품·설계·시공·관리 등 건설산업의 표준화를 하루 빨리 이뤄내야 건설분야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기능의 통합도 필요하다. 연세대 조교수는 “수자원 개발, 하천관리는 건설교통부, 치수·방재 등 재해관리는 행정자치부, 상·하수도 및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 개발은 농림부가 맡고 있다”면서 “종합적 기능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과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안전기획단장이기도 한 황교수는 “국민의 전반적인 안전의식 제고, 정부내 안전관리 조직체계 정비, 분산·중복돼 있는 안전관련 법령 정비 및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선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면 나오는 대책기획단 신설 등은 땀 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시립대 이교수 등은 일관성 있는 건설안전 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박현갑 기자 eagleduo@kdaily.com 게재일자 : 1999년 12월 09일 >

안전사고 예방 만화로 홍보 책자 발간 (2000.4.28)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27일 대형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용 만화책자를 펴냈다. 인천 호프집 화재를 계기로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 ‘안전한 사회, 우리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총 20쪽 분량으로 인천 화재사건의 원인분석과 함께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 등 대 형사고의 피해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이 책자 10만부를 발간, 오는 5월 4일 ‘범국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시·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대도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 구본영 기자 kby7@kdaily.com 게재일자 : 2000년 04월 28일 >

공공건설사업 실명제 실시 (2000.5.10)

정부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3자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 설계자, 시공사 등 관계자 전원의 이름과 작업내용을 기록, 책임 관리토록 하는 건설사업 실명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은 현행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무한보상 기능을 오는 2003년부터 책임보험으로 이관,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종합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부담이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약 20%의 운전자만이 책임보험 보상범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기획단은 설명했다.

이처럼 무한보상 체계가 확립되면 인명피해가 없는 물적 사고는 형사처벌 없이 운전자간 민사문제로 해결하도록 관계법규를 개정기로 했다.

< 구본영 기자 kby7@kdaily.com 게재일자 : 2000년 05월 10일 >

건물 화재보상한도 등 확대 .. 보험가입맨 대출 등 혜택 (2000.3.31)

화재사고 때 건물주의 보상책임을 늘리기 위해 화재보상 한도액을 확대하고 화재보험가입건물에 대해 각종 대출관련 혜택을 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20개의 "안전관리대책 우선추진과제"를 선정,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정부는 우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35만곳의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이후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5만 7천곳에 대해 올 상반기 안에 시정조치를 끝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량 4백 87개, 터널 3개 등 5백 10개의 재난위험이 있는 공공시설물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수·보강키로 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율이 5% 안팎에 불과해 화재사고 보상에 따른 공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 화재보상 한도액을 높이는 등 건물주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안전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대폭 깎아주고 일정기간 이상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방안도 도입된다.

아울러 재래시장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달동네 등에서 개별적으로 설치·사용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및 고무호스 등을 중앙공급식으로 전환, 소형 저장탱크 또는 대형용기 집합시설을 설치해 공동 이용토록 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와 관련한 운전자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재 9개로 분류돼 있는 경찰서의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도면이 오는 7월부터 30~4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현재 40%선인 교통사고 분쟁의 운전자간 자체 해결비율이 80%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획단 관계자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현재 60%인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폭을 70%까지 늘려주는 반면 사고다발자에 대해서는 최고 할증폭을 현행 1백 50%에

서 더욱 늘리도록 자동차보험료를 연말까지 조정기로 했다.

이밖에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안전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인력 및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사고 방지와 시설안전 등을 위한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 서화동 기자 fireboy@ked.co.kr (2000.03.31) >

운전자 종합보험 대인-대물보험 의무가입 (2000.5.9)

앞으로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운데 대인-대물보험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공공공사에 참여한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등 관계자의 이름과 작업내용이 기록되는 건설사업 실명제가 제도화되며, 하도급자가 직접 발주자와 계약을 맺는 공동도급제가 도입된다.

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9일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대책안에 따르면 현행 종합보험의 대인-대물 무한보상 기능을 2003년부터 책임보험에 포함시켜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대물보험 미가입자는 형사처벌되도록 보험제도가 개선된다.

야간 추돌사고 및 뺑소니 차량 식별이 쉽도록 차량 번호판이 야광기능이 있는 번호판으로 교체되고, 제한속도를 41km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택시의 과속-난폭운전 예방을 위해 회사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탑승시각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발급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정승욱 기자 기사입력 시간 : 05/09 17:15 >

”對人-對物 보험가입 의무화” (2000.6.3)

내년 1월부터 전국의 모든 택시는 회사 이름과 차량번호, 탑승시간 등이 기록되는 요금 영수증 발급기를 갖춰 승객이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또 2002년부터 모든 이륜차(오토바이)는 시동을 걸면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는 장치를 달아 야간은 물론 낮에도 전조등을 켜 채 운행하게 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책임보험제도도 대폭 강화돼 2003년부터는 모든 차량이 대인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선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종합대책은 관련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본보 취재팀이 단독 입수한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주택가도로, 이면도로 등에서는 최고 주행속도가 지금의 시속 6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돼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41km 이상 초과할 경우 범칙금 대신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야간 추돌사고를 막고 뺑소니사고를 억제하기 위해선 지금의 페인트식 번호판보다 식별이 훨씬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야간 반사번호판’이 점차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대책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모든 도로를 차도와 보도로 분리하고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횡단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며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자동차의 보도 침범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와 유치원생을 위한 조기 교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모든 가정에 보급하고 초중고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교통안전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나아가 운전면허 취득 요건을 엄격히 해 독학으로 학과시험에 합격한 뒤 전문학원에 등록할 경우 운전예절 교통도덕 안전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10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 이수자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가입증명서 부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책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월 드컵이 열리는 2002년엔 교통사고 사상자가 지금보다 10~20% 줄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효율적인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교통안전대책실을 설치하고 건교부 경찰청 및 지자체에 교통전문 공무원을 배치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세금과 범칙금의 일정액을 교통안전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 기획취재팀 등록 일자 : 2000/06/03(토) 00:55 >

‘안전관리조직 일원화’ 시급 (2000.5.15)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처 등 구체적 방안 강구돼야 안전관리대책기획단, 지난 9일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공청회 개최단(단장 黃鏞周)은 지난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안전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黃鏞周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의식 부재와 법규집행상의 오류가 인위적 재난의 원인”이라며 “작은 정부 구현, 시장경제원리 도입, 현장중심 정책의 3대 기조에 맞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인위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조직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절실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 黃鏞周)은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최종동섭 전 건설부장관, 배한성 방송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종합대책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 동안 검토한 대책안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은 ‘작은 정부 구현’, ‘시장경제 원리’, ‘현장중심운영’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책안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처방안 강구, 인명구조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영의 시스템화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분과별 토론회에서 尹明悟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건축법과 소방법규간의 이원화된 법체계가 현장운영의 취약성으로 작용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건축·소방법규의 소방·방재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 스스로가 인위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孫昞錫 제도개선팀장은 “IMF 이후 건설업체간의 과열경쟁으로 부실공사 발생의 개연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한 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문분야의 시공과정을 투명화하고 발주청의 책임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에 의한 건설분쟁 조정기능을 활성화해 부실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黃祐燦 안전운동팀장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 薛載勳 교통개선팀장이 교통안전시스템 도입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으며, 이 날 발표된 정책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2000.05.15/536호 안전신문 조형래 기자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을 보고 (2000.5.15)

계속되는 대형재난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안전관리기획단 주최로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공청회가 지난 9일 열렸다. 안전관리기획단은 지난 해 12월 1일 김대중 대통령 지시로 한시조직을 구성, 산업안전을 비롯 소방안전, 가스·전기안전, 위험물질, 교통안전 등 종합안전대책을 검토했다.

기획단은 6개월이란 짧은 기간동안 재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목표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왔다.

우선 안전관리대책의 기본방향을 작은 정부, 시장경제원리, 현장중심원리 등 3대 원칙으로 정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안전기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뒀다. 기획단의 어깨는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안전관리정책은 70년대까지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으로, 80년대 후반에 와서 산업안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90년대 중반에 와서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게 됐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는 선진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중복되거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사례까지 발생한다. 교통 부문에 있어서도 엄청난 인명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나 사고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부처도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

그리고 보면 현행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로 ‘중복과 사각문제’가 발생하고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안전관리가 정착되지 못했다.

또 안전과 관련한 중장기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거나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대형재해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제도 보다 실행이 문제였다. 따라서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가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커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안전관련 법규가 일원화 된 관련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해관계가 얽힌 관련부처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 2000.5.15/536 안전신문 사설 >

중복안전규제 기업 발똘는다 (2000.5.22)

전경련 ‘규제개혁 실효성 제고’ 보고서에서 일원화 촉구

우리 나라 노동시장정책 추진과정을 종합 검토하는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국제회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세계은행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사진은 개최 첫날 崔善政 노동부장관(사진 왼쪽)이 축하를 한 후 회의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 의해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 또 다시 정부의 안전관련 중복규제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정부기능의 일원화와 기본법 제정을 통한 중복법의 통합을 촉구하고 나서 중복규제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라는 보고서를 통해 안전을 비롯해 공장건설, 물류, 식수, 환경 등 16개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 규제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안전관리 분야는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60개 법률로 중복규제 중이고 일반안전 분야는 행정자치부 등 9개 부처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25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법정의무교육 실시, 화학공장 공정안전관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별도의 인허가 및 감독을 받아야 하며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기준의 경우 노동부와 산업자원부 간에 상

이한 기준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부처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규제하면 타 부처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경향을 보여 중복규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기능을 1개 부처에 일원화하고 기능통합이 어려울 경우 정책수립은 관련 부처에서 시행하되 집행은 1개 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중복적인 법은 하나로 통합하고 상이한 기준은 기본법을 제정해 기준을 일원화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한 안전전문가는 “안전관련 기능의 일원화와 기본법 제정은 우리의 안전이 바로 서기 위한 선행과제”라며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시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 2000.5.22/537호 안전신문 박창환 기자 >

‘안전점검의 날’ 주체 격상 추진 (1999.12.20)

안전기획단, 6월내 개선안 마련키로

정부는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달 4일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다소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사주체를 격상시키는 등 행사운영과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에 따르면 매달 4일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일부 지방의 경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 대다수 국민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안전점검의 날의 진행 주체가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의 안전문화추진본부이기 때문에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사 진행 주체를 격상해 산업자원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안전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민방위 날과 통합해 안전의 날로 운영하자는 제안과 관련, “지방 실사에서 안전문화추진본부 관계자가 건의했던 내용일 뿐 기획단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힌 바 없다” 며 “현재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2월경 잠정 실무안을 완성한 뒤 5, 6월경 확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안전 관련 민간단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999.12.20/517호 안전신문 박창환 기자 >

기획단 대책안 문제 없나 (2000.5.22)

“단순히 6개월동안 자신들이 만들 것에 대해 홍보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 이번에는 뭔가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랬는데...” 지난 9일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이 준비한 공청회를 빠져나오며 공청회 참석자가 털어놓았던 푸념이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이번에는 무언가라는 심정으로 참석했다가 역시라는 푸념으로 되돌아 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산업안전 선진화 대책이나 각종 안전대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다만 이번 대책의 범주에는 건설과 교통 등 사회전반에 대해서 논의됐다는 점을 빼고는 이날 행사장은 소위 ‘대박난 장사’였다.

준비했던 자료들은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동이 났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서 경청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눈에 띈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벌써 차지해 버리기 일쑤였고 더욱이 자료를 놓고 자리를 비웠다가는 자료는 벌써 남의 손에 들어갈 버릴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이같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점이 여러 군데 눈에 띈었다. 기획단 구성원 자체가 안전보다는 부처의 이익을 위해 파견됐다는 점과 과연 이 대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이다. 이 날 기획단 고위 관계자는 “기획단에 참가한 부처 대표들은 어찌 보면 거국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각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되고 획기적인 대책은 절대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것은 정작 우리가 원하던 합리적인 대책이 희석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대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패널로 참석했던 학계 관계자도 “이번에 세운 대책이 실현된다면 별반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과연 적극적으로 대책이 실현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안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대책이 마련됐다는데 우리는 작으나마 위안을 갖는다. 기획단 해체에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 결정과정에서 대의를 따라야 함은 물론이고 과거처럼 발표만 하는, 또 시간이 지나면 사장(死藏)되고 마는 그런 대책이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다.

< 2000.05.22/537호 안전신문 이윤호 기자 >

보차혼합도로 제한속도 시속 30km이하 제한 (2000.5.10)

<김인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차혼합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현행 시속 40~60km)로 제한되고 모든 택시에 영수증 발급기가 부착될 전망이다. 또 행정자치부와 건교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공청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한 뒤 5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5월말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올 연말부터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보차혼합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현행 시속 40~60km)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불법운전을 방지하고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택시회사명과 요금 전화번호가 기록되는 영수증 발급기의 택시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또 현재 30%에 불과한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보험가입증명서의 차량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차적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륜차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기획단은 이밖에 행자부의 재난관리업무, 건교부의 시설안전 관련 업무, 노동부의 사업장안전 관련 업무 등을 통폐합하고 분산된 안전관리 법률을 일원화해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매일경제2000.5.10(수) 의견.제보 : social@mk.co.kr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폭 확대...저축성 화재보험제 도입 (2000.6.12)

<장광익 김인수> 올 해 우수운전자와 사고다발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폭이 확대된다. 또 안전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가 할인되고 일정기간 무사고 때는 보험료를 돌려주는 저축성 화재보험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국무총리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www.opm.go.kr)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대책 우선 추진과제' 20개를 선정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고로 사망한 운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65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검토한 후 자동차 종합보험 가운데 '자기신체손해' 보상항목에 대해 보험료를 1일부터 평균 1165원 올려 받아도 된다고 손보험회에 통보했다.

< 2000.06.12/540호 안전신문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 분야별 추진과제 (2000.5.15)

계속되는 인위재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안전관리조직을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개편이 절실하며,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에 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단장 황용주)은 지난달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최동섭 전 건설부장관, 배한성 방송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5개월 동안 검토한 대책안에 대해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은 ‘작은 정부 구현’, ‘시장경제 원리’, ‘현장중심 운영’ 등 3대 원칙에 따라 대책안을 수립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직개편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 대처방안 강구 ▲인명구조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영의 시스템화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산재분야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 방지 방안
------	-------------------

공공공사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소재 투명성 제고

손병석 제도개선팀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인해 많은 대형사고를 겪었으며 그 결과 건설분야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형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7차례에 걸쳐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왔지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엇갈려 왔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선 건설공사 수행에 관련된 제반 주체가 실제 작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공건설사업은 발주청이 국민을 대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구매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발주청이 전반적·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건설사업의 실명제가 구축되지 않아 무책임한 사업풍토가 만연해 있다. 앞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설계·시공업체 등 관계자 전원에 대해 실명과 실제 작업내용 등을 기록함으로써 책임의식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화 되지 않은 재래식 생산시스템으로는 건설산업의 투명성과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품질·공정 등이 불투명하고 고비용-저효율 건설관리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까지 발주청과 관련업체간 통합정보화 시스템(CALS)을 구축기로 하고 올해중 입찰·계약분야 전자처리 시범사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하도급 병폐를 해소해야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하도급 위주의 공사관행과 불법·중층 하도급에 따라 부당한 관리비용만 증가하고 부실시공을 초래, 부실업체(Paper Company)가 판치는 불건전한 건설시장 환경을 초래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건교부가 일반·전문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을 도입, 하도급업체도 계약당사자 지위로 격상한다는 방침은 적극 시행돼야 한다.

소방분야	소방 및 위험물 안전관리 대책
------	------------------

행정시각지대 해소 위한 소방기술기준 선진화 시급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최근 씨랜드 및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등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법과 소방관련법규간의 이원화된 관리구조에 기인한 참사로 우리의 안전관리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 중복 및 충돌, 법적 연속성의 결여, 안전 사각지역의 존재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기구나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각종 화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시 인명손실은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인명안전성의 확보는 화재안전분야의 특성상 건축공간계획, 건축재료, 화재대응설비 등 다양한 연관분야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대비를 통해서만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방선진국의 경우 건축공간계획, 건축재료, 소방설비 등의 화재대응수단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화재관련 전문법규를 제정, 이에 근거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화재대응체제는 선진국과 달리 하나의 대상물에 대해 건축·소방법규의 이원화된 관리체제로 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와 체제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건축·소방의 법적 연속성 확보와 행정사각지역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치밀한 조직체계의 활용 또한 미흡한 편이다.

또 건축·소방의 소관부처별 강한 독립성으로 인해 행정적 관리공백이나 사각이 존재하고 전문성 저하로 인한 관리결함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원적 관리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법규상의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건축·소방법규 상호간의 합리성·연속성 확보대책 마련을 위한 소방기술기준 선진화 및 활성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건축과 소방 관련법중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 쟁점사안별로 접근해 사안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누락 부분과 필수 부분에 정책 및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통분야	도로교통안전 개선 방안
-------------	---------------------

사고율 높은 일반국도의 구조물 개발 서둘러야

설재훈 교통개선팀장

도로교통안전 분야의 개선방안은 교통사고를 유형별·용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개선목표 달성을 위해 직접적이고 저비용·고효율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교통사고 유형별 개선방안으로는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열차 사고 감소대책으로 구분된다.

차대사람 사고 감소대책으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는 보차혼합 도로의 속도제한,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시설물의 확충, 야간사고 예방을 위한 가로등 확대 설치 등이 있다.

차대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인단속장비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차대차 사고 대부분이 과속에 기인하며 무인단속장비가 과속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통계에 따른 것이다. 차량단독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도로변에 가드레일 및 충격흡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고 비중이 높은 일반국도에 알맞는 구조물 개발이 시급하다.

철도건널목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철도건널목 사고는 총 95건으로 절반 이상의 사고가 열차가 통과하기 직전 무리하게 건널목을 건너다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실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널목 시설의 입체화가 요구된다.

택시, 버스, 이륜차 등 차량 용도별 안전대책도 논의돼야 한다.

택시의 교통사고는 1만대당 9백 30건으로 승용차 1백 67건에 비해 5.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사납금을 맞추기 위해 운전자들이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완전월급제가 필요하지만 영수증 발급기 부착의 의무화,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2차 대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 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버스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버스 노후화에 따른 기계고장으로 크게 나뉜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전세버스 차량충당조건 및 차량규정을 제도입하는 것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안전문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과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구심점 마련

황우찬 안전문화추진팀장

그동안 안전문화추진운동은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초기단계의 열기가 저하되고 관련부처 참여기관과 업무협조가 미흡했다. 또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련단체간의 통합·조정에 애로가 있어 왔고 시민단체의 안전운동 참여열기에 비해 자체적인 추진 역량 및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시민운동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범국민적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추진주체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문화추진본부를 통합상설기구로 설치·운영해 정부, 시민단체, 언론등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정책결정 및 시행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의 안전운동 추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안전문화 주체로 육성, 민간위주의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단체가 안전문화운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안전문화를 정착키 위해서는 우선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국민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스스로가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야 하며 안전의식이 생활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월드컵 교통신화 만들기 운동 전개와 범국민적 안전생활실천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또 조기안전교육과 평생안전교육의 내실화, 안전문화 체험공간을 확보, 운영하는 등 생활안전교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2000.5.15 안전신문 특집/536호 >

국민 안전을 위한 안전연대 시민공청회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 출범

안국무조정실장 “안전한 나라 후손에게 물려주는 계기 되길...” 축사 (2000.7.17)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연대가 안전한 나라 만들기’ 라는 한목소리로 공식 출범했다.

이는 순수 시민단체들간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상호간의 노력이 바탕이 돼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경우 국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선진국 진입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안전연대(상임대표 宋梓 안실련 대표, 殷芳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는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한국노총, YMCA 전국연맹, 시민문화발전모임 등 16개 단체 대표단과 회원 및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연대 창립대회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안전연대의 출범으로 교통·산업·건설 등 그동안 각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돼 왔던 각종 안전사업이 힘을 얻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나섬으로써 국민 안전의식 확립이 급류를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殷芳姬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자리는 국내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자리”라며 “국민안전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연대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특별기구의 설치와 소방인력 확보를 위한 의무소방대 신설, 1천만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참석자들은 안전의 파수꾼역할 수행과 안전법규 준수 생활화, 교통법규 위

반차량 계도, 생활안전 가족회의 개최, 운전중 양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5가지 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앞으로의 안전활동을 다짐했다.

한편 행사 뒤 마련된 ‘국민안전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 축사로 나선 安炳禹 국무조정실장은 “씨랜드 화재사고와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는 우리 모두의 안전 무관심이 만든 후진국형 재해”라며 “오늘의 공청회가 안전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崔秉烈 안실련 공동대표와 黃鏞周 안전관리대책기획단장이 기조연설을, 尹明悟 서울시립대 교수와 宋在雄 시민문화발전모임 운영위원장, 許億 안실련 안전사업실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참석한 시민들과 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안전연대의 출범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거 안전관련 기관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벌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들어 각 단체간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안전문제에 대해 초단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00.07.17/545호 안전신문 이윤호 기자 >

8. 안전관리 홈페이지 운영 현황

○ 현 황

1. 분야별

분야	계	조직개선	안전운동	제도개선	교통개선	기타	비고 (무관)
건수	38	2	3	9	6	3	15

2. 내용별

분야	계	안전 시스템	산불 안전	자동차 안전	지하철 안전	가스 안전	승강기 안전	공사장 안전	항공기 안전	기타	비고 (무관)
건수	38	3	6	5	1	1	1	2	1	3	15

※ 총 38건중 안전분야와 무관한 15건 제외함

○ 처리내용

구분	계	유관기관 송부	기획단 자체검토	기타	비고 (무관)
건수	38	3	17	3	15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한 전건 E-mail 회신함

안전관리대책 의견청취

NO	제 목	게시일
1	『가정』	2000.02.23
2	『공공』 승강기 안전에 관하여	2000.03.09
3	『공공』 위기상황을 주변에 알리는 방법	2000.03.13
4	『학교』 벽지 폐교 학교 아년체험장으로 거듭나야 등	2000.03.24
5	『산업』 부실공사를 고발!!	2000.03.29
6	『교통』	2000.04.02
7	담배갑에 산림보호세를 신설 요청	2000.04.03
8	산불에 대하여	2000.04.12
9	강원도 산불안전관리 대책	2000.04.15
10	<기타>산불진화의 효율화 방안	2000.04.16
11	『공공』 안전관리 업무 개선 요청	2000.04.18
12	『교통』 test	2000.04.19
13	『교통』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나는 이렇게 제언했었다	2000.04.21
14	『교통』 건물목 사고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2000.04.23
15	『공공』 해마다 계속되는 대형산불 확산을 막으려면	2000.04.25
16	『공공』	2000.04.25
17	대통령지시 사항을.....	2000.04.25
18	대통령지시 사항을...	2000.04.25
19	『교통』	2000.04.28
20	『교통』용인 수지1지구 현대아파트 주변 주차단속 되기만 손꼽아 기다림	2000.04.29
21	안전관리대책기획단 홈페이지의 “안전” 분야 범주화와 관련하여	2000.05.03
22	지하철 안전에 대하여	2000.05.04
23	『공공』충진중인 자동차의 시동이 정지되는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4	『공공』충진중인 자동차의 시동이 정지되는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5	『공공』충진중인 자동차의 시동이 정지되는 오발진방지 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6	『공고』충진중 자동차 시동정지 오발진사고방지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7	『공고』충진중 자동차 시동정지 오발진사고방지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8	『공고』충진중 자동차 시동정지 오발진사고방지장치 설치권고	2000.05.04
29	『공공』자동차 주유중 엔진정지장치 설치로 주유소 화재 예방	2000.05.06
30	『기타』 우리는 교사들과 신분이 다르다	2000.05.08
31	『기타』 없음	2000.05.11
32	『공공』	2000.05.16
33	『산업』 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채용에 대한 의문제기	2000.6.17
34	『기타』 의학 분업에 따른 의사협회의 파업에 병원 체권자로 대처하면 어떨지	2000.6.18
35	『가정』 아파트 공사에 다른 배수로 공사지연 민원	2000.6.18
36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0.6.19
37	『공공』 영양사에 관한 규칙건	2000.6.20
38	『교통』 문화일보 “죽음의 고갯길”에 대하여	2000.7.16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행처 : 국무총리실 안전관리대책기획단

발행일 : 2000. 9.

이 책의 내용이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의
활동에 관한 문의는 다음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전 화 : 02-732-8560~1
